



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현장 체감도’ 높인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부산지역 현장간담회(10월 15일)에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된 337건 중 처리가 지연된 25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법령 지자체 집행실태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모든 규제건의 과제의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간담회(뚝뚝 톡), 열린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은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시행 50일전(11월 12일)부터 전국동시 캠페인을 벌이고, 체험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주요 개선과제 >

-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총82건)
 -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 (2013.11)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 발급 기능(2014.6)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연간 약 740억원 환급(2013.12) 등
- ◇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신속 조치(총9건)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2014.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폐지(2014.12) 등



협업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 주변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청

정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경제 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국내 항공사도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항공사 간 경쟁력을 높였다.

미생물제조 업종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농공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은행 신용평가 시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하였다.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사회적 기업 조성을 보다 촉진하였다.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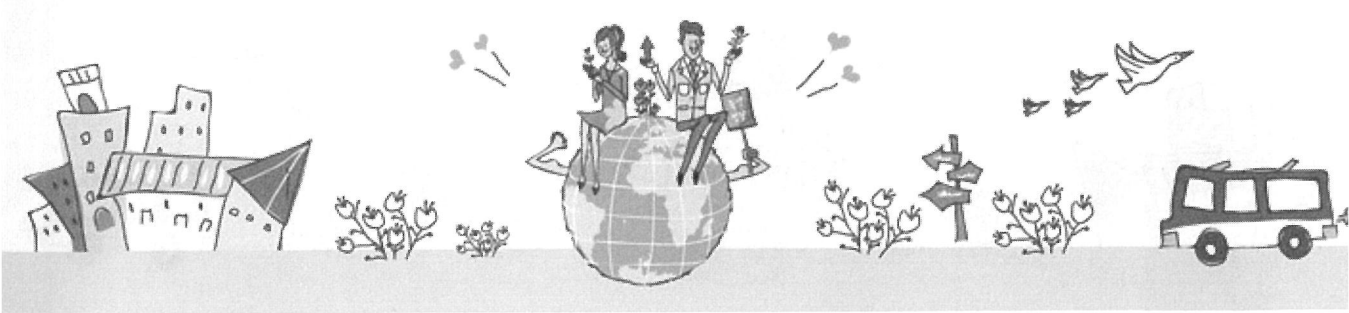
해외 체류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해외 공관을 통하여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바로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후 은



행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공시하고 있는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토록 하였다.

⑤ 부산 지역 기업어로 해소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이 도로의 제한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신고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하였다.

재래식 향만 내 조명시설이 하역작업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등 지역현안도 해결하였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

□ 새주소 도입에 따른 활용도 제고와 부처협업을 통한 효율적 홍보방안의 주요내용.

① 홍보 계획

12월까지 TV동영상, 라디오, TV 자막 광고 송출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시내버스 포스터 부착, 동영상 자막광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내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시행 50일전인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하기, 기업 및 경제 단체 임원 명함 바꾸기 등 전국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행 30일전인 12월초에는 전세대(2,030만)를 대상으로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부처·자치단체·주요민간협회(31개)가 참여하는 '주소전환민관협의회'를 통해 40개 선도기업의 주소전환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

팅도 지속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각 부처 협업 방안

관련 기관 공통 사항으로 임직원 교육 및 소속 공기업·산하단체·비영리단체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스마트폰에 내 주소 저장하기 등 '내 주소 알기·쓰기·바꾸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는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공인중개사 등 주소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 업체가 회원가입·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의 주소 전환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달청, 중기청, 특허청 등에서도 각종 계약 시 도로명 주소 사용, 해외등록 특허에 대한 주소 변경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K)